

Cover Letter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다.

열린 사회를 연구하고 있다.



공동선, 우리가 함께 연주하는 선율

공동선(common good)은 어떤 개인을 위한 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위한 선이다. 선은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 함께 거주한다 해서 공동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삶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연관성을 유지하려는 어떤 도덕적 목표를 공유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 그 목표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공동선이다.

공동선은 공동체가 산출한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자 기반이다. 그것은 한 사회가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과 같다. 각 악기가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악기를 침묵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악기의 소리를 통해 더 풍부해지는 조화의 상태다.

공동선과 비슷한 단어로 공공선(public good)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끔 혼용되기도 하지만, 두 단어는 사용되는 맥락이 다르다. 공동선은 공동체의 목적이나 규범에 관한 개념이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어떤 공동체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전제한다. 그래서 항상 규범적이고 정치철학적 논쟁을 불러온다. 반면에 공공선은 경제학이나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방식에 관한 개념이다. 이 재화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 관리할 것인가, 철도회사를 공기업으로 할 것인가 사기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공선에 관한 문제이다.



공동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철학적 정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규정하면서,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잘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때 ‘잘 사는 삶’은 개별적 쾌락이나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실현하는 좋은 삶의 조건을 의미한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이성과 덕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며, 법과 제도는 이 목적을 향해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선은 개인에게 억압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탁월성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다. 정의로운 제도, 신뢰 가능한 규범, 상호 책임의식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유가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토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를 두 범주로 나눈다. 지배자가 공동선을 추구하면 올바른 정체고, 지배자의 사익을 추구하면 타락한 정체다. 말하자면, 올바른 정치체제란 지배자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체제라는 이야기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이나 공화주의자들도 공동선을 정치 공동체의 고유한 목표로 재확인한다. 그들은 공동선을 단순한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완전성을 증진하는 질서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공동선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며, 숫자의 우위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조와 방향성을 규정하는 질적 기준이다. 이들은 공동체가 공동선을 상실할 때, 제도는 회형만 남고 구성원들은 상호 불신 속에 분열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과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할 도덕적 이상이 있을까? 우리는 제 각기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다른 도덕과 이상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동의 이상을 설정하려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근대 이후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선 개념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였다. 존 로크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개인의 자연권보호에서 찾았으며, 국가는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정당하다고 보았다.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다. 다원주의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이다. 이때 공동선을 하나의 도덕적 교설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일까? 왜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일까?

존 롤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선 대신에 정의를 제시한다. 정의란 공정한 절차의 원칙이다.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원칙이다. 이런 정의의 원칙에 동의한다면 목표가 다르더라도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번성기 때, 정의의 문제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다.

정의가 어떻게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정의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의 틀은 공동체가 당면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다. 정의 없는 공동체는 단순한 이해 집단이거나 지배 구조에 불과하다. 반대로 정의가 작동하는 공동체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존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공동체 위에 덧붙여진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공동체이게 만드는 근본 조건인 것이다.



정의가 쉽게 실현될 수 있을까? 정의만 실현되면 공동체의 존립과 번영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 될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공동체가 단순히 권리와 의무의 배분체계에 머물 경우, 구성원들은 서로를 공동 운명의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정치적 공간은 협력의 장이 아니라 이해 관계의 교환소로 전락할 수 있다. 정의의 기준에 합의를 보기도 어렵다. 상황에 따라 정의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제도적 틀을 넘어, 상호 신뢰와 연대의 감정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 팬데믹, 기후 위기,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은 개인의 선택이나 정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에만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선은 다시금 우리의 관심을 끈다.

공동선이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명제는 결국 인간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독립된 원자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언어, 제도, 경제, 문화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공동선은 이 관계망을 유지하고 심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것이 무너질 때 공동체는 해체되고, 남은 것은 고립된 개인들의 불안한 집합뿐이다.

따라서 공동선은 선택 가능한 하나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공동선을 성찰하고 갱신하는 작업은 곧 공동체의 자기 이해를 갱신하는 작업이다. 공동선을 외면한 자유는 공허해지고, 공동선을 억압적으로 강제한 공동체는 경직된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동선을 대립항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공동선 속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공동선이 자유를 통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법의 지배, 권력의 분립, 공적 토론의 활성화는 모두 공동선의 일부이다. 공동선은 개인의 자유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가 구조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조건이다.

공동선은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토론과 비판, 참여와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공동체는 공동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 속에

서만 유지된다. 이 중에서도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가 공동선의 실천자인지, 아니면 사익을 추구할자인지를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